전두환 고향 찾은 5·18 피해자들 "학살자 흔적 지워라"

12·12 45주년 맞아 합천서 '전두환 미화시설' 폐지 촉구
일해공원 명칭 변경도…"혈세로 기념물 설치는 2차 가해"

12·12 군사반란 45주년에 맞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에서 전두환 미화 시설 폐지를 촉구했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의 수장인 전씨가 자신을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부터 새벽 사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다.

5·18기념재단은 12일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회원들과 옛전남도청원형복원지킴이 어머니 등 42명과 함께 경남 합천군에서 이같은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합천에서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 운동을 해 온 '생명의 숲 살리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회원들이 동행했다.

이들은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일해공원'을 찾아가 공원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해당 공원의 이름 '일해'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의 아호 일해(日海)에서 따 온 것으로, 당초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으나 2007년 합천군이 자체적으로 공원 명칭을 바꿨다.

5·18 피해자들은 일해공원 내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한다'는 문구가 적힌 비석에 '내란수괴 전두환 윤석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5·18 피해자들은 비석에 계란 등을 던지고 '비석을 철거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돼 왔으나, 합천군의 비협조로 번번이 무산됐다.

운동본부는 최근 국회전자청원 웹 사이트에 게시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지난 8일께 목표 청원 동의 수인 5만명을 돌파했으며 12일 현재 9만 9783명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목표 동의 수를 달성한 데 따라 의안에 준해 처리돼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은 합천군 내 전두환 생가에 항의성 방문을 하고 전두환 생가 앞에 설치된 안내판에 5·18과 관련된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점을 규탄했다.

안내판에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서 전씨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하자 합동수사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만 쓰이고, 전씨가 '취임 때의 단임 실천 약속에 따라 자진 퇴임했다'는 등 왜곡된 내용이 적혀있는 점 등도 지적했다.

5·18 피해자들은 합천군청 내 군수실 앞에서 낮 12시부터 7시간 넘게 기다리며 합천군수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군수가 10일 이내 면담을 약속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45년 전 12·12 군사반란 일어났던 12일 오전 오월 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을 방문해 공원 표지석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씨가 이미 1997년 내란죄 선고를 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는데도 학살자를 찬양하고 세금을 들여 기념물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역사에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학살자를 찬양하는 것이자 5·18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합천군수가 책임을 지고 5·18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잊지 말자 정선엽 병장…동신고 추모식

광주 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조영종)는 12일 오전 1979년 12·12 당시 쿠데타군에 맞서 육군본부 벙커를 끝까지 지키다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45주년을 맞아 모교 동신인민주화운동 기념비 앞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 선·후배, 재학생 등 참석자들이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광주시 동신고 총동창회 제공〉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 자치학교 확대

시교육청, 내년 27곳 늘린 168곳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형 미래학교'로 운영하는 자치학교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치학교는 시교육청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학교급·규모별로 1000만~4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사회·학부모·학생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실천한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9.1%(27개교)를 늘린 168개 학교를 자치학교로 운영한다.

이들 학교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필수과제 1개와 권장과제 1~2개를 선택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필수과제는 미래교육·실력향상·기후환경생태·교육복지·세계시민·다문화·문화예술체육·지역사회 연계·학교 자율주제 등 9개이며, 권장과제는 비전 공유·인성교육·기초학력·교원 수업지원 등 4개다.

올해 141개 자치학교 운영에서는 교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6%가 운영 프로그램에 만족했으며 94%는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자치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학교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올해 자치학교 141개교와 2025학년도 신규 참여학교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자치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애인 시외이동권 소송 7년 만에 종결…내년 2월 선고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 해 달라는 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됐다.

12일 광주지법 별관 206호에서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 심리로 배영준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배씨 등은 "고속버스회사인 금호고속이 자사 차량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한 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유사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가 지난해 3월부터 재판이 재개됐다.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들의 이용 노선과 시기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운영 적자도 누적돼 시설 도입이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측은 "장애인 차별 구제를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며 "광주시도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 특별히 광주시만 잘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변했다.

원고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소아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도 동등하게 교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정당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7년간 애쓴 장애인들의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